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급물살 지자체 성패 사례 살펴보니

청주시, '도농 복합도시 정착' 대표적 성공 사례
 창원특례시, '산업·상관·항만' 기능 분담 안착 배경
 여주시, 산업관리 일원화... 통합 필요성·효과 분명
 전주·완주, 생활권 공유에도 자치권 약화 우려로 무산

과거 세 차례 무산됐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의 지지와 시장·도지사 추진 힘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공개적 찬성에 나섰고, 시·도 교육감도 교육융합을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에서도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것보다 달리 주민 반발과 정치적 이권에 부딪혀 좌초된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점에서, 이번 논의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목적·생활권 맞아떨어진 통합은 안착

2014년 통합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통합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통합 이전 당시 청주시는 도심 중심의 행정·산업 기능을, 청원군은 농촌·산업단지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사실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었다.

통합 과정에서 청원군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자와 행정서비스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이끌어냈다.

통합 이후 청주시는 도농복합도시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 중복을 줄였고, 산업단지 조성 등 교통·도시계획을 하나의 틀로 묶어 중복권 거점 도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2010년 출범한 경남 창원특례시는 행정 중심 도시 창원시와 상관·구도심을 가진 마산시, 항만·군항 도시 진해시 등 다른 성격을 지닌 세 도시를 묶는 사례다.

통합 초창기 각 지역 정체성 훼손과 불균형 우려도 제기됐다. 우려와 달리 통합 이후 국가산단과 항만을 축

서 광역 도시 기능이 강화됐다. 지역 간 갈등은 있었지만, 명확한 도시 비전과 기능 분담 제도가 안착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1998년 전남 여주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은 산업도시 재편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례로 평가된다. 석유화학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행정 구역 분리에 따른 산업 관리와 도시계획 수립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이 추진됐다.

통합 이후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 관리 체계가 일원화됐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계획 수립도 속도를 냈다. 지역민과 산업계에 통합 필요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공유돼 행정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이밖에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전후 시·군 단위 통합이 이뤄졌다. 전남 광양시(동광양시+광양군)와 경남 통영시(통영시+통영군), 전북 군산시(군산시+옥구군)는 도시와 주변 농촌 지역을 하나의 행정체제로 묶어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투자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통합이 추진됐다.

광양시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 제철소 중심 도시 개발 편중에 대한 불안 등 지역 내 우려와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제철소와 항만 개발 등 대형 산업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됐고, 산업·행정 관리 일원화 필요성 등으로 통합이 무산될 정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군산시도 옥구군을 중심으로 도시 중심 행정 편중과 균형 소재지 상실, 농촌 소외 우려 등 반발이 있었지만 생활·경제권이 이미 상당 부분 통합돼 반대가 확산되지 않았다.(2면에 계속)

군산시도 옥구군을 중심으로 도시 중심 행정 편중과 균형 소재지 상실, 농촌 소외 우려 등 반발이 있었지만 생활·경제권이 이미 상당 부분 통합돼 반대가 확산되지 않았다.(2면에 계속)

군산시도 옥구군을 중심으로 도시 중심 행정 편중과 균형 소재지 상실, 농촌 소외 우려 등 반발이 있었지만 생활·경제권이 이미 상당 부분 통합돼 반대가 확산되지 않았다.(2면에 계속)

'통합 블랙홀'에 요동치는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판

'지방선거의 해' 벽두부터 40년 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지역 정·관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판도 변화와 함께 출마 예정자들의 기류 고민도 불가피해졌고, 제3의 인물 등판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8일 광주·전남 정·관가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이 선출되고, 7월1일 '광주·전남 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통합단체장(광주·전남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종의 '통합타이틀전'이 치러지게 된다.

자연스레 선거구역은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시장·지사 후보군 모두 특

2월 통합 특별법 통과되면 6월3일 '통합단체장' 선출해야
 선거구·경쟁자↑ 판도 변화·불확실성에 거취 고민 불가피
 민 예비·조별경선, 野 후보단일화 촉각, 제3인물 등판설도

별시장 후보군으로 변경·전환되게 된다. 현재 광주시장 출마예정자는 10명 안팎, 전남지사 입지자는 6~7명으로, 총 16~17명이 통합단체장 후보군으로 이동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무려 9~10명이 이른다.

자연스레 텃밭 수성에 나선 민주당에서는 자격심사에 이은 예비경선, 본경선 등 3단계 공천이 예상되고, 야권에서는 표 결집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 조별 경선을 치를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현역 단체장 평가도 변수다. 출마 전 최종 관문격인 중앙당 평가위원회의 현직 단체장 평가가 오는 20일까지 이

어지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한 평가(성과와 PT와 면접)가 지난 6일 진행된 데 이어 8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가 시·도당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누가 하위 20%에 포함되느냐'로,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 최하위 1명은 향후 경선 득표에서 최소 20%의 치명적 감산(페널티)이 적용돼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위 20% 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거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거취를 고민하는 입지자는 점차 늘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U턴설, 불출마설 등이 나오는 까닭이다. 불출마와 U턴은 관련 선거 구도에 2차, 3차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광주·전남 통합 확정 시 선거판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보간 이합집산이나 교육감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여부도 관심사고, 특히 통합단체장 선거가 인지도 경쟁으로 변질 경우 광주·전남을 아우를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이나 청와대·중앙 정부 고위직, 지역연고 명망가 등 제3의 인물이 등판할 수 있다는 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출마자 대부분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어 판도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거 같다"며 "9일 청와대 회동과 15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후보별 거취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장어평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평가 청산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평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평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